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5. / (총 16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한 연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과 장 담 당 자	김 영 두 양 회 필		061-286-6010 061-286-6040
경찰청 수사과	과 장 담 당 자	손 제 한 김 우 석		02-3150-2068 02-3150-2626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과 장 담 당 자	김 기 용 이 성 훈		044-201-3526 044-201-3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타지자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 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 (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러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7일 ~ 6월 20일	6월 21일 ~ 7월 4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6.7명	46.9명
지역사회	36.8명	31.1명
수도권	33.4명	19.4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4건	12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9.9% (65/654)	10.7% (70/656)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2 전라남도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
-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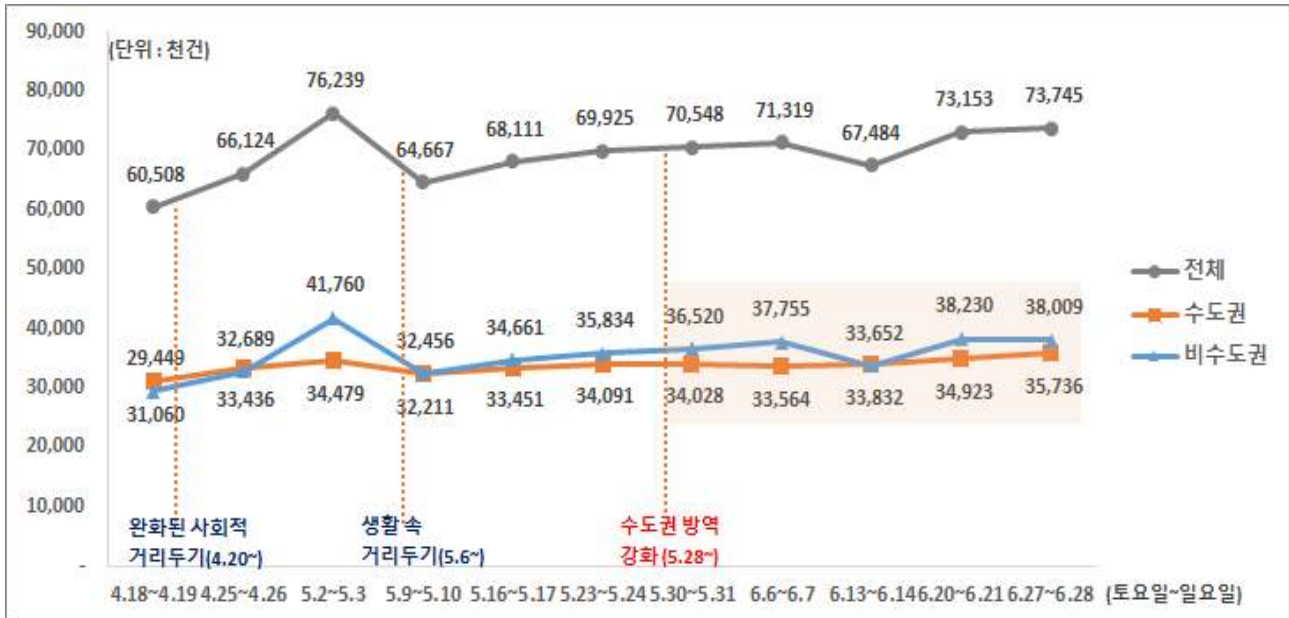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인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①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②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③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4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집회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방역조치 위반	입원거부 등
합 계	1,071	478	425	109	44	13	2
송치 의견	기소	492 (구속 10)	299 (구속 7)	111	54	18 (구속 3)	10
	불기소	50	31	5	6	4	3
수사 중	529	148	309	49	22		1

-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단위: 명)

합계 (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	북부								
1,071	339	45	73	77	37	6	2	5	240	62	8	40	41	26	21	25	13	11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 ▶ (격리조치 위반)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 구속
- ▶ (역학조사 방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 /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 고 거짓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 구속

-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 하였다.

< 대중교통 내(內)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 현황(7. 4.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합 계	폭행·상해	업무방해	특가법	협박	모욕·기타
합 계		110	56	35	11	3	5
송치 의견	기소	21 (구속 1)	9	7	4 (구속 1)	-	1
	불기소	7	6	-	-	1	-
수사 중		82	41	28	7	2	4

-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5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전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 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 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